

# 대구시 지방채 추가발행 “글썩요”

## 시의회, 도로건설 토지보상 등 390억 편성 회의적

대구시가 민선4기 출범 두 달 만에 390억 원 규모의 빚을 내 도로건설에 필요한 토지보상 등 재정운용 확대를 꾀하고 나서 대구시의회의 승인여부가 주목된다.

대구시는 '2006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올해 당초 지방채 발행 1천945억 원 외에 39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지방채 추가 발행 사업으로는 △팔공로~봉무산업단지간 도로건설 토지보상비 250억 원 △팔공로~공항교간 도로건설 공사 및 보상비 140억

원이다. 전자의 경우 오는 10월 본격화되는 봉무지방산업단지 편입 토지 2차 보상을 앞두고 분할 및 부분 보상을 우려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시가 빚을 내서라도 동시 보상을 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후자는 건교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개선 국비지원 사업 지정에 따른 국비(공사비 50%) 100억 원 지원을 앞두고 지방비(공사비 100억 원과 토지보상비 40억 원) 확보 차원이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 승인권을 가진 대구시의회는 회의적이다. 내달 4일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의 심사를 앞두고 최근 추경예산안 편성 보고를 받은 최문찬 부의장은 “대구경제 살리기라는 큰 틀에서 보면 성서 4차 단지와 구지 공단 진입도로를 내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충환 부의장도 “35만5천 여 평에 이르는 봉무단지 개발에 따른 교통유발로 인해 도로개설을 하자는 것인데 아직 편입 토지 보상도 덜 끝나고 개발방식 변화에 따른 설계용역 결과도 내년 7월에야 나올 예정”이라

며 “재정 형편이 좋을 때라면 미리 토지를 사놓으면 좋겠지만 빚을 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이동교 대구시 예산담당관은 “요즘은 토지보상도 현실가 보상이어서 보상이 늦어질 경우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10월 2차 보상과 같이 하지 않을 경우 봉무지방산업단지의 원만한 추진이 어렵다”며 지방채 추가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민선 4기 첫 지방채 발행은 “집행부를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야심찬 출발을 보인 제5대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선정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느냐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문정화기자 moonjh@idaegu.com